

# 비무장지대 반달가슴곰이 산다

야생 상태로 서식 모습 촬영 새끼 포함 최소 3마리 확인 외부에서 이동 가능성은 희박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 내 무인생태조사 장비에 찍힌 반달가슴곰이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 <환경부 제공>

반달가슴곰(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 비무장지대(이하 DMZ)에서 야생 상태로 서식하는 모습이 최초로 근접(약 5m 거리) 촬영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DMZ내 설치한 무인생태조사 장비를 통해 DMZ 동부 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DMZ에 사진기의 일종인 무인생태조사 장비 92대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1대에 지난해 10월 반달가슴곰 1마리가 찍혔다. 군부대는 보안 검토 등을 거쳐 올해 3월 국립생태원으로 이 사진을 보냈다.

그동안 DMZ에서 반달가슴곰을 봤다는 군인 목격담이 있었고 반달가슴곰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담긴 희미한 영상이 있었지만, 반달가슴곰 서식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등을 고려하면 DMZ 외부에 서식하던 곰이 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촬영된 반달가슴곰은 과거부터 DMZ 일대에서 반달가슴곰이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있었고, 야생 개체의 후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진에 찍힌 반달가슴곰은 태어난 지 8~9개월 된 어린새끼로 몸무게는 25~35kg일 것으로 추정되며, 계곡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립생태원은 부모까지 최소 3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이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1년 5마리이던 반달가슴곰은 현재 지리산과 수오산 일대 야생에서 61마리가 서식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MZ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 무인생태조사 장비의 설치를 늘리고, DMZ 일대 생태계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DMZ 일원에 총 616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은 총 102종(저어새, 두루미, 재두루미,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으로 국내 멸종위기종 총 267종의 약 38%에 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안군 외업산도·대술개도 방목염소 35마리 포획키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식생 파괴하고 자연경관 훼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된 신안군 흑산면 소재 외업산도와 대술개도에서 지역주민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획 활동은 몰이꾼 등 20여 명이 방목염소 약 35마리를 몰이방식으로 그물로 유도에 불잡을 예정이며, 포획된 개체는 재 방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에 기증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특정도서의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정도서는 연안에 산재한 무인도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 255개소의 특정도서 중 약 50%인 128개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인 전남·제주·남해·하동에 밀집해 있다.

흑산면 외업산도와 대술개도는 해식애, 토르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는 등 생물 종다양성이 높아 2012년 11월 전국 183, 184번째 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정도서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세계 생물다양성·자연의 혜택 급속 악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경고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

2000년 이후 지구에서 매년 평균 650만 ha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전체 생물 종 가운데 100만 종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 종의 8분의 1에 해당)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이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전자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이하 지구평가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600년 이후 척추동물은 최소 680종이 멸종했고, 고기를 위해 가축화된 포유류 559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생물 멸종 속도는 지난 1000년도의 평균보다 수십~수백 배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 양서류의 40% 이상과 해양 포유류의 3분의 1 이상, 상어와 어류의 3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가 꼽혔다. 이어 인간이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두 번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세 번째 위협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6600만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mass extinction)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인간 역시 단기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생존을 담담할 수는 없다고 연구에 참여한 한 학자가 지적했다.

생물의 멸종을 막으려면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2016년부터 3년간 50개국의 전문가 460여 명이 참여했으며, IPBES의 파리 총회에는 104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로버트 왓슨 IPBES 전 의장도 "인간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 개회식에서 프랑스 환경부 장관(Francois de Rugy, Minister for the Ecological and Inclusive Transition)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전 지구적으로 경제, 생계, 식품안전, 건강, 삶의 질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그 감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내 정책도 보고서 내용에 발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 음식물 돼지에 주지 말아야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우려가 커질 경우 상황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지고 동물에 감염되는 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 없다.

중국(지난해 8월), 몽골(올해 1월), 베트남(올해 2월), 캄보디아(올해 4월) 등 아시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우려가 커 비상이 걸린 상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환경부, 물 관리 분야 조직 개편 추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통합 물 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7월부터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 개편은 관련 업무 총괄 기능 강화, 중복 업무 통합, 하·폐수 통합 관리 등으로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하던 광역상수도 업무는 지방 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회과로 이관했다.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온 지하수 수량 업무는 토양지하수과로 옮겼다.

상수도정책과 아래 있던 생활하수과는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한국·전북·전남·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정책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성광에너지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